

호남 광역 에너지공동체 용역 착수

민주 원내대표 회의실서 착수보고회... 신재생에너지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 전략 수립

전북도가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00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전남과 손을 잡고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호남권 광역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호남을 하나로 묶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용역은 민주연구원과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당 및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2월부터 용역을 시작, 5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RE300을 지향하고, 발전단지 인근 주민을 위한 에너지전환 기본소득 지원방안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

지역은 국내 유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단지와 산단이 근접한 지역으로 RE100을 통한 한국형 그린뉴딜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특히,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산단 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충분할 것으로,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RE100을 지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북·광주·전남 등 호남권 광역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민주 이원택 의원 "코로나19 피해 농가 실질 지원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외식업, 숙박업종 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농업·농촌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할인쿠폰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있었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매년 현장에서는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농업·농촌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가를 포함시키고, 농가가 실질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극소수 중범죄의사 대변 의협 파업위협 멈춰라"

이명연 도의원 "의협 불법 집단행동 강행시 전북도, 강력한 행정력 발동해야 할 것"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1)이 "극소수 중범죄의사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파업위협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연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야 7인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했다.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직의 윤리 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의사협회는 적극 나서서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처방 없이 하는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로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거대하려는 집단행위는 인륜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명연 의원은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북도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극소수 중범죄 의료인들 때문에 대다수 코로나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실시

전북도가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개소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문화자원 등의 현황을 자료화하는 '자연자원조사'를 추진한다.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자연공원 관리 전문 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들이 도립공원의 4계절 자연생태계 모습을 현장 조사해 자연생태계와 경관 및 문화자원 현황을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과 식물의 분포·서식 현황 및 토양, 지형지질, 경관·문화자원 등의 다양한 분야를 조사한다.

이번 자원조사는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유호상 기자

'전문지식 풍부·강인한 업무 추진력이 강점'

신임 전북연구원장에 권혁남 전북대 교수 내정

전북연구원 이사회의(이사장 장명수 前 전북대 총장)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전북연구원장에 권혁남 전북대 교수(65·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원장 채용공고 및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원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23일 전북연구원 이사회를 거



쳐 권혁남 전북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장명수 전북연구원 이사장은 "권 교수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강인한 업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전북연구원을 잘 이끌어갈 책임자로 판단해 선정하게 됐다"면서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 발전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북 대도약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원장 채용공고 및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원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23일 전북연구원 이사회를 거

국민의힘, 비례 당선권에 호남인사 25% 우선 배정

당 상임전국위원회서

국민의힘은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에 부의한 바 있다.

취약지역 비례 우선추천제는 국민의힘 취약지역인 호남지역의 당세를 넓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다.

당내 호남을 대표하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김중원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해 10월 국민통합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50명의 호남동행의 원단을 발족시키고 예산, 법안, 지역현안 및 영호남 연계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친호남 행보에 나서면서 호남지지가 점차 반등했고, 무엇보다 정 위원장이 소속의원 85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낸 것이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운천 위원장은 연초부터 두 달 가까이 당내 102명 전체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작업을 펼쳤으며, 4월 재보궐선거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민들의 민심을 짚아야 한다는 명분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정당이 호남에 대해 시용만 했던터에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위원장은 호남동행의원들의 동행지역구 방문 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동물등록 신청해야 반려견 구매 가능

도, 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신청서 제출 시·군 등에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인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지난 2017년 3억7,000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 칩)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